

유익하고 흥미로운 삼각관계 이야기

신옥희 지음,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를 읽고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I.

『삼각관계의 국제정치』(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의 저자 신옥희 교수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외국의 국제정치이론가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이다.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신 교수의 국내외적 명망은 그의 해박한 국제정치적 지식뿐 아니라 이론적·역사적·정책적 마인드가 하나의 통합적 인식구조에 수렴되어 보다 완전하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미중일 관계의 전망: 역사적 유추(historical analogy)의 두 관점,” 『국가전략』(2013),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통합적 이론으로서 위협균형/위협전이론,” 『아시아리뷰』(2012), “다자주의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1997) 등의 논문에서 시도된 그의 이른바 ‘총체론적(holistic)’ 분석은 『삼각관계의 국제정치』에서 완숙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II.

『삼각관계의 국제정치』에서 신 교수가 갖고 있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세계·지역 패권을 향해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미국 일본(또는 미일동맹) 등 기존 패권

세력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보적 불안정성과 불확정성 하에서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국가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반응국가(reactive state)”의 입장이 아닌 “일정한 자율성의 범위를 전제하고 구조의 전환에 상응하는 ‘주체(agent)’의 관점”에서, 냉전기 한국에게 익숙했던 전통적 ‘한미일 삼각관계’에 새롭게 형성되는 ‘한중일 삼각관계’를 오버랩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복합화된 지역적 국제정치의 현실을 상정하고, 이러한 신전략 구도 하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중추적 역할(pivotal role)”로 규정된 한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책략을 제시하고 있다.

신 교수는 한국의 최적화된 국가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 ‘지역’의 범주를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아시아라는 공간을 상정하고 있고, 일본은 동맹국 미국과 연결된 아시아·태평양을 자신의 지역적 토대로 삼고 있으나, 한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를 전략적 지역의 무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나 학술연구자들은 이러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조명·분석함으로써 한국을 위한 최적의 국가전략을 찾아낼 수 있다.

신 교수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데 ‘전략적 삼각관계’의 개념이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그가 요약한 바와 같이, 디트머(Lowell Dittmer)에 따르면, “단순한 양자관계의 합이 아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기적인 삼자간 관계, 즉 협력과 갈등에 대한 유인과 제약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호의존적인 세 단위 간의 관계”, 내부에는 세 가지 “패턴동학(pattern dynamics)”이 존재한다. 세 행위자들 간의 상호우호적 관계들로 구성되는 “삼인일가(ménage à trois)”, 제 삼자가 제외된 “안정된 결혼(stable marriage)”, 하나의 중추적 행위자가 두 사람의 “구혼자(suitors)”들 사이에서 득을 보는(play off) “낭만적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가 그것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낭만적 삼각관계”에서의 중추적 위치를 발견·차지해야 한다. 한국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두 행위자로부터의 호의의 존재와 적의의 부재”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인들 사이에 “케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먹을 수는 없다(You can't have a cake and eat it, too.)”라는 속담이 있지만, 1970

년대 초 미중화해의 물꼬를 튼 키신저는 미국은 이제 “우리의 ‘마오타이’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보드카’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My Trip to China, 1973). 이는 물질능력에서 우월한 다른 두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려는 한국의 경우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낭만적 삼각관계’에서의 전략적 위치설정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신 교수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개념에 기초한 ‘전략적 삼각관계’가 한중일 삼각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는 삼국 간 지속적 갈등의 주요 원인인 역사·주권·민족주의 문제 등 비물질적 요인을 조명해야 할 필요성뿐 아니라, 한중일 관계가 “보다 상위의 양자관계, 즉 식민주의 시기의 영터 관계, 냉전기의 미소관계, 탈냉전기의 미중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때로는 냉전기의 북중소 관계와 한미일 관계, 현재의 한미일 관계와 같은 또 다른 삼각관계와 중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 나아가, 한반도 분단체제, 양안관계, 일본의 평화헌법과 같이 구성단위가 주권적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는 달리 “안보딜레마 민감성(security dilemma sensibility)”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안보역설(security paradox)”이 지배적 의미를 갖는 특수한 형태의 동북아 안보구조의 경우는 안보딜레마론이라는 “보편적 국제정치이론”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국제정치적 보편성을 지양하고 동북아적 특수성에만 집착하지는 않는다. 그는 한중일 관계를 보다 적실(的實)하게 조명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으로부터 ‘구체적 시공간’에 걸맞은 이론적 개념과 인식의 틀을 도출해내고 있다. ‘위협전이론’, ‘양면안보딜레마론’ 등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위협전이란 “하나의 사건의 발발, 혹은 주체의 투사에 따라 위협이 전이되고, 이렇게 형성된 위협인식이 다시 주체의 행위를 통제하는” 현상이다. 이는 “미국(국내정치엘리트)이 자신의 적을 ‘만들어’ 온 부분이 있는 것처럼” 위협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고 전이되는 것이며, 특정한 정치적 물질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면에서 그 존재론/인식론적 기반을 구성주의와 신고전적 현실주의에 두고 있다. 신 교수는 이와 같이 위협이 국내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전이된 결과 양면안보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엘

리트에 의해 위협이 제시되고, 그러한 위협인식이 타국의 엘리트나 자국의 대중에 의해 공유/확산되어 이후 엘리트의 대외정책적 선택을 제약하는,” 간단히 말해,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상황이 발생하여 “절대적 혹은 상대적 손실의 계산을 넘어서 전체적(total) 손실이 선택될 수도 있는 감정적 선택(emotional choice)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보편적 국제정치이론에서 도출된 ‘맥락-특수적(context-specific)’인 이론적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보편적 국제정치이론 일반이 보여줄 수 없는 한중일 관계의 특수성으로 예를 들어, 이들 국가 간 관계를 지배하는 ‘윈셋(win-sets)’이 아닌 ‘루즈셋(lose-sets)’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적실한 이론적 렌즈를 찾는 문제와는 별도로, 이와 같은 “한중일 관계의 특수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신 교수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배하는 관념적 구조를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구조는 이들이 경험한 근대(탈근대)의 맥락, 즉 식민주의, 탈식민화, 냉전, 탈냉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식민주의 시대가 조선에 남긴 관념적 영향은 국가 간 관계에 새로운 기준으로서 “천하질서/종주권 체제”가 “근대국제질서/조약 체제”로 대체되는 일련의 국내정치적 갈등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중일 삼각관계는 전략적 사회적 성격을 갖는 삼자주의와는 거리가 멀었고, 조선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추적 역할은 고사하고 주체적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려웠다. 신 교수는 식민주의기보다 냉전기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특히 한국전쟁과 “샌프란시스코체제(대일평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내외적 안보위협 및 전후를 내다본 전략적 고려뿐 아니라, 소련과의 사회주의 혁명 목표 공유, 북한과의 반식민(항일) 반봉건(국공내전에서 공조)적 연대를 위해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참전은 공산위협에 대한 미국 내부의 “냉전적 합의”를 공고히 하면서 미중관계를 혐오와 대립으로 고착시켰다. 한국전쟁의 부분적 결과로서 성립된 샌프란시스코체제는 한국전쟁과 함께 미국이 일본이라는 기존의 위협을 공산주의 중국 및 북한으로 대체하며 위협전이를 현실화한 주요 결과이자 지역질서가 되었다. 그 결과, 남방삼각동맹 대 북방삼각동맹 간의 냉전적 대립구도가 형성되었고, 이는 구성원

들의 국제정치적 가치관에 지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행사하였으며, 한국은 생존을 위해 “반공주의와 미국과의 연대”를 안보전략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식민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추 이전에 온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신 교수에 따르면, 냉전의 종식은 기존의 한중일 관계에 근본적이고 새로운 역동성을 부가하였다.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남방·북방 대립구도가 이완되고, 한중일 삼각관계는 사실상 한미중일 사각관계로 전화(轉化)했으며, 따라서, “측면연계(lateral linkage, 각각의 양자관계와 역외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가 중요하게 대두한 것이다. 한국의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특기할만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간의 세력전이 가능성이다. 신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이익에 기초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보다는 안보이익에 터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더 중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미일동맹은 무역갈등으로 인한 냉전 초기의 표류를 극복하고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관념적 연대”로서 그 의미가 더 강화되고 있지만, 이의 부작용 또는 ‘역화(backlash)’는 동북아에서의 안보딜레마를 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일관계에서는 역사의 해석을 둘러싼 대립, 더욱 중요하게는, “민족주의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가?”와 관련한 의견 충돌이 이들 국가의 보수세력의 국내정치적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위협스럽게 증폭되고 있으며, 미중관계의 극적 개선이 없는 한 한중일관계는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외교적 지향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대외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일진대 이명박 정부 이래 한국은 중국 일본 모두와 동시적 우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이른바 ‘균형자’나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옵션이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자주의 외교가 한국의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아세안 방식(ASEAN Way)’은 “약소국의 중추적 역할 찾기”와 관련 통찰력을 제공하나 지역안보를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아시아·태평양을 포괄하는 광역다자주의에는 “정체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있으며, 한중일 삼자주의에는 “영토와 역사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신 교수는 “유럽식 국제사회”가 동북아에서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는 “특수한

주권적 형태(원민족주의, 식민주의, 양차대전, 냉전 등에 기인하는 지향적 민족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이 지역의 “단위들의 특수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단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안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왜 군사력을 독점하는 단일영토국가가 21세기 동북아의 궁극적 단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포스트모던적 질문을 던지면서, “국가의 민주화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단위 간 제도적 연계 모색”에 선행하거나 이와 병행하여 “일국양체론, 수정된 보통국가로서의 일본, 국가연합 형태로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등 “단위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일 때만 모든 행위자가 참여하는 지역적 제도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주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오랜 시간 상호작용해왔던 한중일 관계에 대한 신 교수의 이론적 역사적 분석은 이 책의 결론이자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국가 전략에 대한 정책적 고찰로 이어진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상대적인 힘의 열세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상수의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한국에게 익숙한 한미일 관계와 상대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한중일 관계의 “교차점에서 한국이 갖는 주체성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신 교수는 21세기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게 새로운 지정학·지경학적 환경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동맹정책과 지역정책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지역주의의 현실성과 한중일 삼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이러한 전략적 무대에서 “낭만적 삼각관계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대신, 중추의 역할이 어렵다면 협력의 중재, 매개, 촉매 등의 보완적 역할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통해 국가이익을 촉진하려면 “동맹의 유지와 지역의 구성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는 주체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일관계의 연속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일관계의 갈등적인 측면을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위협론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이나 경시” 모두를 거부하면서도, “일본위협론의 지나친 도구적 강조 역시 경계하여야 하며, 한일관계가 두 삼각관계의 교집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활용의 가능성

을 열어두어야 한다.”

신 교수는 이와 같은 관념적 지도원칙을 제시한 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일 관계의 동맹 중심 전략과 미래 한중일관계의 지역중심 전략을 ‘복합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복합화’ 전략의 첫 번째 대상으로서 ‘6자회담’을 제시하면서, 비록 중국의 정책적 딜레마(북한의 비핵화 대 북한체제의 안정)나 일본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의 강화를 위한 “위협투사” 전략이 회담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중국과 일본(그리고 북한)을 포괄하는 협의를 시도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III.

『삼각관계의 국제정치』에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신 교수의 접근법이나 문제의식은 몇 가지 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첫째, 한중일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의 역사와 진화에 대한 그의 사려 깊은 서술뿐 아니라, 이 글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그가 이 주제를 조명하는 데 있어 총체론적 시각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각통합인식구조’(박건영, 2018)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접근법은 모든 진지한 국제정치학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능력이자 덕목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국제정치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푼다(problem-solving)’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정책결정자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론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의 논리구조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다시 말해, 이론은 “여기를 봐!(Look here!)”라고 우리들에게 지시(指示, illuminate)하며, 그간 인지되지 못했거나, 명료하게 인식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해결을 전제로 한’ 문제제기를 돕고,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의 존재 이유와 그 작동원리를 설명해줌으로써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산출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것이 어떠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애초에 발생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변수들의 개입에 의해 변용·복합화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역사에 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론의 지시와 역사의 이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즉 정책과 전략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정책과 전략은 현실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이론의 수정과 보완을 추동한다. 요컨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되고, 끊임없이 현실에 조응하도록 변화하는 ‘하나의 통합된 인식론적 고리’로서의 ‘이론·역사·정책의 삼각통합인식구조’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정책결정자들에게 경협·감(感)·추정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현실 변화와 인간 삶의 개선에 ‘안전하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은 일련의 전제들(assumptions)을 채택함으로써 분석 대상이 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단순화하여 설명하려는 사회과학적 접근법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다양한 수준의 수많은 변수들이 산출한 복합적 결합의 결과이고, 여기에는 이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역사적 과정이 응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하고 편리한 사회과학적 그림’은 ‘부족(incomplete)’할 뿐 아니라 ‘오도(誤導, misleading)’나 ‘호도(糊塗, glossing over the reality)’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 교수는 『삼각관계의 국제정치』에서 전제들을 자유롭게 채택하는 사회과학적 편의주의에 기초한 정태적 분석을 지양하고, 이론·역사·정책이 상호개입하고 매개하는 부분을 포착하는 통합적 인식론적 틀을 사용하여 시공간의 구체적 맥락을 살림으로써 문제의 ‘핵심(core)과 진수(essence)’를 발견하고, 변화하는 복잡한 현실에 보다 근접한 역동적이고 뉘앙스에 민감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였다.

둘째, 신 교수는 한국 국제정치학계에 구성주의를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실험/적용시켜온 장본인답게 동북아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도 관념변수가 필수불가결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역사사회학적으로 논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관점이 중시하는 이론적 간략성(theoretical parsimony)의 중요성이 과장되어 있음을 암시하면서, 미국적 실용주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관에 기초한 ‘일반화(generalization)’에 대한 맹목적인 우상화(偶像化)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한 사안이다.

디트머가 말했듯이, 전략적 삼각관계는 합리적 선택을 전제하는 게임의 일종

이다. 그리고, 게임(이론)의 핵심은 “행위자들의 선택이 수렴되는 결과의 효용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행위자들의 선택은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주관적 가치관과 그의 배경이 되는 그들의 시대적 관념구조에 대한 이해는 게임의 논리와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된다. 이것이 게임 이론가와 지역전문가가 협업해야 하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연애하는 커플 간의 서약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특정 종교 하에서는 맹세가 신에 대한 불경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에서 서약의 가치와 후자에서의 맹세의 가치는 천양지차인 것이다. 맹세의 외양은 같지만 등가적(等價的) 행위는 결코 아닌 것이다. 남한이 국가보안법 폐기를 북한의 노동당 규약의 개정과 교환하자고 제의한다면, 또는 북한이 북중동맹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동시에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거래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남과 북의 관념적 구조를 고려하면 이들은 등가교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숫자의 배열을 통계적으로 가장 잘 대변하는 숫자는 평균이지만, 이 평균은 배열된 숫자들 어느 하나와도 상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결국, 국제정치에서 ‘현장감 있는 통찰력’은 (통계적) 일반화에 대한 추구가 아닌 특정 시공간의 관념구조를 의식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에서 도출된다. 관념변수에 대한 신 교수의 조명과 분석은 문제에 대한 ‘현장감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신 교수의 이론적 ‘사각지대(blindspot) 없애기’가 돋보인다. 그는 주제와 관련된 일련의 대안적 이론들을 동원하고, 이들 간의 논쟁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여 각 이론들의 장단점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이론적 조명에 있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다. 적지 않은 국제정치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론들을 동원하고 일방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한다. 반론이 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과는 논리적 비약이고, 논리전개의 타당성과 정확성의 결핍, 그리고 처방의 비현실성이다. 독자들은 저자의 일방적인 정당화를 짹짹하게 따라가다가 결국 황당한 결과를 보고 ‘헐~’을 외치게 된다. 주지하듯이,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에 따르면, 이론(conceptual model)은 “분석가가 특정 행동이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자료 속에서 끌고 다니는 고기잡이 그물의 코를 조절하고, 분석가에게 그가

원하는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의 그물을 특정한 연못, 특정한 깊이로 투망할 것을 지시한다.”(Allison, 1969) 은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안적) 이론들은 지배적 이론(합리적 주체 모델)이라는 ‘대형 형광등’이 비춰주지 못하는 대형 교실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빛을 보냄으로써 교실 전체에 대한 보다 완전한 파악과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손전등’ 역할을 한다. 손전등들이 잘 안 보이던 “거기를 보여주는 것(Look there!)”이다. 이러한 ‘손전등’이 많이 동원되면 될수록 우리는 ‘사각지대’ 없이 장소의 면면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전체를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신 교수는 제기될 수 있는 이론적 도전이나 반론을 그 자신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독자들이 ‘찝찝함’을 가진 채 책을 읽어나가도록 강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대안적 손전등들을 촘촘하게 배열함으로써 무리한 일방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이론적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고, 설명과 이해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신 교수는 ‘위협전이론’과 ‘양면안보딜레마론’이라는 ‘손전등’을 사용하여 세력균형론, 세력/패권전이론, 위협균형론, 안보딜레마론이라는 대형 형광등이 비추지 못하는 한중일 삼각관계의 어둡고 희미한 구석(국내 차원의 정치적 물질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위협과 그 결과로서 정치엘리트들의 자승자박, 국가 간 관계가 국내정치와 연계되어 협상을 위한 윈윈이 아닌 협력을 저해하는 루즈렛의 존재가 중요하게 된다는 사실 등)에 빛을 비춰주었고, 역사적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해주었다.

셋째, 극단적인 이념이나 가치관에 기초한 흑백논리와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신 교수의 침착함과 분별력이 인상적이다. 이론이나 역사, 특히 정책을 다루는 국제정치학자들은 좌우의 ‘악마(evil)’를 잡는 데 몰두하느라, 그것에 앞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간과할 수 있다. 저비스(Robert Jervis)는 목적론의 위험성을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던 사람들은 미국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다른 한편, 베트남에서의 패배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패배에 따라 미국이 입게 될 다른 차원의 피해도 크지 않다고 믿던 사람들은 미국이 승리할 수 없다고 믿었다(Jervis, 1968). 목적이 (사실에 대한) 예측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카아(E. H. Carr)가 이미 지적했듯이, 절대적으로 필

요한 것은 문제의 뿌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명료한 해설(dispassionate analysis and lucid exposition)”이다(Carr, 1964). 신 교수는 ‘중용적 방편(via media)’을 찾으면서 자료와 자세에서 엄격하며, 이념과 가치관의 과잉을 경계하고 있다. 신 교수의 절제되고 신중한 접근법은 결과적으로, 분석의 정확성과 적용의 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진지한 국제정치학자에게 정확성과 현실성은 ‘덕목’이 아니라 ‘의무’이다.

IV.

『삼각관계의 국제정치』의 정확성, 참신성,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지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신 교수가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토론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평자는 동북아 삼각관계와 국제정치에 관한 그의 발제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자는 새로운 한중일 삼각관계가 전통적 한미일 삼각관계와 결합한 ‘사각(四角)의 전략구조’를 상정할 때 비로소 현재적·미래적 설명과 예측에 현장감을 준다는 신 교수의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핵심변수가 되는 미중관계의 성격이 세력전이로 파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기관과 국제기구가 내놓는 지표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은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올겐스키(A. F. K. Organski)의 고전적 세력전이론뿐 아니라(Organski et al., 1981)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의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Mearsheimer, 2014), 엘리슨과 하버드대 벨퍼센터(the Belfer Center)가 과거 500년의 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인 ‘투키디데스의 함정(The Thucydides Trap)’이라는 개념은(Graham, 2015) 학계와 주요국의 안보정책서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과연 세력전이와 패권전쟁을 우려할 정도인지 더 세밀한 조사와 숙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제규모는 사회주의국가들에 적용되는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PPT 자료는 국내 실제 구매력을 기준으로 책정한 환율에 기초한 것으로

로서 상품가격(특히 생필품)을 낮게 통제할 수 있는 사회주의 및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규모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도 기지(既知)의 사실에서의 추정인 ‘외삽(extrapolations)’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 지표는 고속성장이 동반하는 인플레이, 빈부/도농격차, 환경악화, 국내 정치사회적 문제 등의 중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뿐 아니라, 경제가 성숙하면 나타나는 ‘천정효과(ceiling effect)’도 포함하지 않는다. 패권전쟁과 연동된 세력전이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경제 규모 외에 내적 구매력(따라서, 자구력)과 국력의 질(質)을 반영하는 일인당소득 수준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세계평균의 58%(2017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의 경제성장전략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미국 등과 같은 서방 선진국들에서는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2/3를 넘나드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국내 소비가 10년 전 35%, 아직도 60%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Dong, 2019). 이는 중국의 성장이 수출과 투자만 강조하는 ‘불균형성장모델’에 입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상호의존적인 세계 경제체제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성장은 임금상승이라는 도전과 함께 고도성장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중국의 과거 10여 년 동안의 성장은 인프라, 공장 및 주택 건설, 고속철과 운송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채무는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났다. 현재 중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50%로서, 이는 중국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불허하는 요인이 된다. 최근 중국의 긴축정책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2018년 6.6%)을 초래하였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9년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Shane, 2019).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군사·전략적 요인도 간과될 수 없다. 우월/열등감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때로는 정치적으로 조장된) ‘중국특색적 민족주의’가 추동하는 대규모의 군비확충은, 그것이 가지는 ‘파생효과(spin-off)’를 고려한다 해도,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하여 중국의 부상을 역설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제국적 팽창”의 효과가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분리주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수십 년간의 중소분쟁은 ‘아프간 비용’과 함께 소련의 재정적 붕괴를 야기한 주요 요인이었다(Tucker, 1995-96). 신장-위구르와 티벳을 관리·통제하는 비용은 중국 재정에 위협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세력전이를 가정한다 해도 이것이 패권전쟁을 야기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20년 전에 제시된 로스(Robert Ross)의 “평화의 지리학”은 이런 면에서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Ross, 1999). 그에 따르면, 미중관계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 “방어지배적(defense dominant)”이다. 냉전기 미국 소련과는 달리 탈냉전기 미국 중국은 태평양에 의해 분리되어 있고, 세력권이 지리적으로 분명하며, 상대를 정복할 수 없는 지리적 조건하에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천연자원 및 인구 면에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갖고 있고, 면적 및 내적 동원 라인 차원에서 상당한 “전략적 중심(strategic depth, 국방3선)”¹을 확보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수단으로 하는 “내부적 균형(domestic balancing)”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조건이 적 해군의 내륙 공격을 불허한다. 태평양은 대륙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벽이고, 미국의 세계 최강의 해군력과 함께 대중국 해상포위망(동맹국, 우방국)은 중국의 대미 공격에 대한 “해양력 균형(maritime balancing),” 또는 심도 있는 전략적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구나, 중국은 안보적 우선순위를 해양세력이 아닌 대륙국가인 러시아와 내부적 취약성(신장-위구르)에 두고 있으므로 후방의 취약성을 의식하지 않은 미국과의 일전은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다.

이와 같은 “방어지배적”인 지리적 조건은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세력권에서 확보하고 있는 “방어적 우위(대륙에서는 중국이 우세, 해양에서는 미국이 우세)”를 부각시키며, 양국을 동아시아에서 “방어적 무기특화(weapons specialization)”로 유도하고, 핵억지력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현상타파적인 “공격지배적(offense dominant)” 관계나 행동에서 이익을 발견하지 못한다.

미중간 세력전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도, 세력전이의 위협에 대한 선제적 공세나 정치적 과장이 패권전쟁의 위협을 실제로 높이고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전략’이 중국의 대외인식에 영향을 주고,

¹ 일본의 지리적 조건은 함정에 의한 공격에 취약하다.

그 결과,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 등의 현실에 대한 오인·오식이 원인일 수 있고, 또는 신 교수가 강조하듯, 미국이라는 주체가 자신의 국내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위협을 투사하는 측면, 즉 ‘주적 만들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평자는 세력전이가 허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능력의 부상과 행태적 적극성은 미국 일본 등에 분명히 위협으로 인식될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외교안보노선이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주동작위(主動作爲),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남에게 압력을 가하며 짓누른다”는 돌돌핍인(咄咄逼人)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일부 중국 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중 간 세력 전이와 패권전쟁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기엔 적지 않은 물질적·관념적·지리적 변수들이 아직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은 채 산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의 관념적 구조가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으나, 식민주의나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적 대립에서 비롯된 관념 변수 외에 보다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따라서 상수(常數)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관념변수들에 대한 조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한중일 삼각관계의 현재와 미래는 결국 기존의 패권국 미국을 결부시키지 않고는 설명/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차원에서 미중 양국의 독특한 ‘태생적 세계관,’ 그리고 그것들의 대립과 충돌적 측면이 삼각관계, 사각관계, 육각관계의 논의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각 ‘예외주의(exceptionalism)’로 정신무장된 독특한 국제적 주체들이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법적 정체성의 뿌리를 미합중국 ‘헌법 제정자들(Founding Fathers)’에서 찾듯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관적 정체성의 뿌리를 1620년 첫 번째 청교도(후일 필그림으로 알려짐)를 신세계로 실어다 준 ‘메일플라워 호(The Mayflower)’나 ‘플리머스 바위(Plymouth Rock),’ 그리고 1630년 청교도 지도자 존 윈스롭(John Winthrop) 목사가 매사추세츠만으로 가는 ‘아벨라 호(Arbella)’ 선상에서 행한 설교, “기독교적 관용의 모델(A Model of Christian Charity)”과 마태복음 5장 14절의 ‘산중의 도시(city upon a hill)’라는 상징적 개념에서 찾는다. 그만큼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핵심인 개인의 자유를 신성시하

는 가치공동체라 할 수 있다.² 이러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관은 케네디(1961년 1월 9일 당선인 연설), 레이건(1980년 11월 3일 유세 마지막 연설), 오바마(2006년 6월 2일 매사추세츠대 졸업식 연설) 등 많은 정치인들에 의해 미국 예외주의의 관념적 기초가 되었다(Rodgers, 2018).

한편, 미국 예외주의는 19세기 중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국제주의적 미션의식은 강화되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해야 할 신앙적 의무를 강조한 미국의 지도자는 “자유국의 제국(Empire of Liberty)”의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이 노선의 신봉자였던 링컨, 윌슨, 맥아더, 케네디, 존슨, 닉슨, W. 부시 등을 포함하였다.³ ‘명백한 운명’은 20세기 초 미국의 영토확장의 종료와 함께 팽창주의적 내러티브를 버리고 개입주의(interventionism) 수사(修辭)로 옷을 갈아입으며 레이건과 W. 부시 등 네오콘(neoconservative)의 시대에 그 영향력이 절정에 달하였다. ‘민주주의의 횃불(beacon of democracy)’인 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나라(indispensable nation)’로서 전 지구적 경찰(world’s policeman)의 역할을 자처하였다.

물론 미국의 예외주의가 신화적 요소를 갖고 있지만(Gamble, 2012; Hodgson, 2010), 그러한 신화가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실용주의 노선의 정치지도자들조차도, 비록 수단은 달리하지라도, 자유주의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반영하며 자유주의 국제체제 유지 비용 전담을 거부하고, 미국 최우선주의 또는 “미국 민족주의(Blake, 2018)”를 선언하는 등 고립주의적 행태(예를 들어,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선언)를 표출하고 있지만, 이는 부분적으로는 전술적·전략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지도국의 역할

² 최근 ‘뉴욕타임즈’의 사설은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예외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The Editorial Board, 2019).

³ Donald M. Scott, “The Religious Origins of Manifest Destiny,” <http://nationalhumanitiescenter.org/tserve/nineteen/nkeyinfo/mandestiny.htm>; 윌슨과 맥아더와 관련해서는 Anders Stephanson(1996), John W. Dower(2000) p. 217 참조. 보스트도르프(Denise M. Bostdorff)는 케네디, 존슨, 닉슨, 레이건, 부시를 예로 들며, 그들은 “미션과 명백한 운명이라는 신화”를 통해 “우리” 그리고 미합중국을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Bostdorff, 1994: 220).

은 운명(born to lead)”이라는 미국의 생래적 신념(conviction)과 가치관에 대한 ‘재편(realignment)’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n First)’는 오히려, ‘돈 안 들이고 리드’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의 일부일 뿐 자유주의적 예외주의는 미국 대외정책의 관념적 기반으로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예외주의는 “중화사상”에 터해있다. “세계의 중심이고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한 최고 유일의 선진문화를 가진 중국”이라는 개념은 BC 221년 진(秦)에 의한 통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왕조에 걸쳐 이적(夷狄), 만이(蠻夷)의 습속에 대한 자신의 문화의 우월성 강조하는 화이관(華夷觀)으로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중국은 “중국의 것을 가지고 미개민족을 변화시킨다”는 일종의 제국주의적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었다(이춘식, 2002). 그러나, 19세기 중반 “오랑캐”와의 아편전쟁에서의 패배에서 시작한 국가해체 수준의 역사적 재앙, 즉 “100년의 수모”는 중국인들의 대외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휴즈(Christopher Hughes)에 따르면, “유럽의 종교개혁 시기 바티칸의 권위에 대한 의문과 도전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문명화된 국가들(또는 주권국가들) 간의 (자유주의적) 국제법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였다.”(Hughes, 1995) 그러나 자유주의는 중국 중심의 위계질서, 즉 천하질서에 대한 유럽 근대 국제체제의 외적 타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중국에 인식되었다. 자유주의의 메신저가 제국적 국가였다는 점에서 중국 내 자유주의적 담론의 주제는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 자질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자유주의적 국가의 성격을 창조하는 방책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최고 이상(理想)은 ‘은유적 국제사회’의 한 주체로서 “국가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조직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내부적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영국/미국의 자유주의에서는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에 관한 담론과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이라는 원칙이 신성시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개인적 자유의 가치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국가의 자유를 확보하는 과제와의 양립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었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국가건설과 국민형성 필요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했고, 이는 “구국(救國)”이라는 지고(至高)의 내러티브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중국은 국가 몰락의 위협을 연상시키는 ‘개인의 자유’라는 관념의 도입이나 확산을 경계하고(Zhou, 2005), “국가 간 관계에서의 국가의 자유”를 중시해 왔으며, 결과는 강렬한 주권의식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비타협적 주장이자 집착이었다. 2011년 천안문 광장에 설립된 중국국가박물관에 영구 전시되고 있는 ‘부흥의 길’에 따르면, “중국의 현대사는 서구제국주의의 원죄이자 중국을 ‘수모의 100년’으로 밀어 넣은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예외주의는 중화사상과 ‘수모의 100년’에서 비롯된 ‘외현적(外顯的) 자부심(pride)’과 ‘내현적(內現的) 열등감(inferior complex)’으로 이뤄진 경합적 복합성을 갖는다. 이들의 상대적 우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탈냉전기 중국의 부상은 중국 예외주의의 외현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몽(中國夢)’에서 역설적으로 표현되는 역사적 상처와 피해의식은 양자가 자민족중심주의로 결합된 형태인 ‘중국 최우선주의(China First)’를 산출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기독교적 선민의식과 개입주의적 미션의식에 기반하여 ‘일탈한 국가나 사회’를 자신의 신조와 가치관에 따라 개조하려는 신념에 찬 ‘관념적 제국주의’로서의 미국의 예외주의와 민족주의적 선민의식 위에 상처 받은 국가적 자존심과 피해의식이 올려 놓인 형태의 ‘고토회복주의(irredentism)’로서의 중국의 예외주의는 관념적으로 양립하기 어렵고, 여기서 비롯된 이들 간의 불신과 대립은 양국의 전략계산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상수라고 봐야 할 것이다. 동북아 삼각관계들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근본 가치관이 충돌하는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중국 문자를 쓰는” 일본이 “수모의 100년”을 상기시키면서 미일동맹을 고리로 “도발”할 경우, 이는 중국에게는 단순한 이익의 충돌이 아니라 ‘중국적 국체’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고, 중국의 ‘과잉반응’을 야기하여 의도하지 않은 재앙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박건영, 2013).

미·중간 예외주의적 가치관의 대립과 충돌적 측면은 신 교수가 지적한 식민주의와 냉전적 관념변수와 함께 동북아의 삼각, 사각, 육각관계에서 근본적인 관념적 구조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가 세계적 차원의 정치 경제적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나, 적어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현실주의적 전략 계산이 이러한 태생적 관념적 구조의 제약 하에 있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국가전략에 동반되는 암묵적 전제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편이고, 민주국가에서의 국가이익은 국민의 이익이다. 문제는 외교·안보의 이슈라 하더라도 절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이익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한국인들의 일부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통일을 원한다. 통일을 원하는 구성원들 간에도 평화통일만을 인정하는 세력과 평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세력도 있다. 국가이익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방법론적인 논쟁은 이러한 국가이익 내용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보다 구체적 현안을 예로 들어, “탈북 돕기는 한국의 국가이익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논쟁은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일단 논외로 하면, 국가이익의 내용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찬성론자는 인권이라는 보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비평화적 접근도 무방하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자는 (아마도 더 큰 가치, 따라서 더 큰 국가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결국 ‘폭력의 수단’을 독점하는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그러한 정치적 실체가 위협으로 느낄 만한 행동(예를 들어, ‘탈북 돕기’)을 자제하며,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인권상황 개선 등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가이익의 내용과 국가목표를 공유한다는 전제는 방법론상의 논쟁을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모든 방법론적 논쟁은 “두 사람이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으며 사실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talking past one another),” 또는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전략에 관한 토론은 국가이익의 내용이나 국가목표가 공유되고 있는지 파악될 때 비로소 그 전략에 대한 ‘현실성을 담보한’ 분석과 비판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이슈로서, 국가전략이 정책적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안자가 국가이익의 내용을 체계적이면서도 동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국가이익의 내용은 고정되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국제적 주체들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의되며, 국

제적 구조 및 해당 국가의 정치적 정체성의 변동에 조응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시각은 분석가로 하여금 ‘여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감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남한이 북한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그럴 수도 있다. 만일 협력의 과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relative gains)을 취하고, 이것이 축적이 되면, 지속적 협력은 남한의 국가이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 간에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한으로서는 상대적 이득에서 초래되는 문제는 없지만, (비록 불균등하고 불리한 배분이지만) 남북경협을 이용하여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남한이 제외된 상태에서 타국들이 북한과 협력하여 그 과실을 자신들끼리만 분배할 경우 남한이 치러야 하는 경제·안보적 비용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이익은 타국들과의 관계의 맥락에서 분별력 있게 정의되고 기민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이익은 또한 동태적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즉 국제구조의 변동과 내부적 정체성의 변화는 국가의 전략적 득실구조를 바꾸어 놓게 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의 종식,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의 변화, 중국의 부상,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발전, 사회적 세대교체 등은 한국의 국가전략의 대전환을 야기한 사변적 사건들이다. 세상과 나 자신이 변하고 있는데 특정 국가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는 시각은 목적론의 위험성을 내포할 뿐 아니라, 현실과 전략 간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적 생산성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V.

앞에서 평자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한다고 했으나, 사실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문이 든다. 만일 신 교수에게 평자가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학문적 능력과 『삼각관계의 국제정치』에 대한 존경이고 상찬(賞讚)이다.

일반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담은 글은 흥미롭지 못하거나, 흥미 위주의 글은 절제의 미가 결여되기 마련이다.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에서 신옥희 교수는 냉철하고 신중한 분석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동북아의 ‘삼각관계 이야기’를 설득력 있고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다. 학자나 지식인들이 필히 읽어야 할 책은 많지만, 유익하면서도 재미있게 읽혀지는 책은 많지 않다. 이런 면에서 신 교수는 이 길지 않은 글을 통해 특히 젊은 국제정치학도들에게 ‘지적 모범’이 되고 있다.

투고일: 2019년 1월 24일 | 게재확정일: 2019년 1월 29일

참고문헌

- 박건영. 2018. “국제관계사란 무엇인가?” 『국제관계사: 사라예보에서 몰타까지』, 사회평론.
- _____. 2013. “오바마의 주판과 긴 파장?: 재균형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3호.
- 이춘식. 2002. “중화사상의 형성과 본질.” 『중화사상의 이해』, 신서원.
- Aaron Blake. 2018. “Trump’s embrace of a fraught term — ‘nationalist’ — could cement a dangerous racial divide.” *The Washington Post*, October 23.
- Anders, Stephanson. 1996. *Manifest Destiny: American expansionism and the empire of right*. Hill and Wang.
- A. F. K. Organski and Jacek Kugler. 1981. *The War Ledg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llison, Graham. 2015.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September 24.
- Arthur Dong. 2019. “Apple’s problems sound alarm bells about China’s future.” CNN Business Perspectives, January 4. <https://edition.cnn.com/2019/01/03/perspectives/apple-china-warning/index.html>.
- Christopher R. Hughes. 1995. “China and Liberalism Globalized.” *Millennium*:

-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4(3), pp. 429-30.
- Daniel Shane. 2019. "China posts slowest economic growth since 1990." CNN Business, January 21. <https://edition.cnn.com/2019/01/20/economy/china-economy-q4/index.html>.
- Denise M. Bostdorff. 1994. *The Presidency and the Rhetoric of Foreign Crisi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p.220.
- Daniel T. Rodgers. 2018. *As a City on a Hill: The Story of America's Most Famous Lay Serm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onald M. Scott. "The Religious Origins of Manifest Destiny."
- Edward Hallett Carr. 1964.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rper Perennial.
- Godfrey Hodgson. 2010. *The Myth of American Exceptionalism*. Yale University Press. <http://nationalhumanitiescenter.org/tserve/nineteen/nkeyinfo/mandestiny.htm>.
- Graham T. Allison. 1969. "Conceptual Models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3), September, p. 690.
- Richard M. Gamble. 2012. *In Search of the City on a Hill: The Making and Unmaking of an American Myth*. Continuum.
- Robert Jervis. 1968. "Hypotheses on Misperception." *World Politics* 20(3), April, pp. 462-463.
- Robert S. Ross. 1999.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23(4), Spring.
- John J. Mearsheimer. 2014.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 Company.
- "My Trip to China," 3.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March 2, 1973, *FRUS*, 1969-1976, Volume XXXVIII, Part 1,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1973-1976.
- John W. Dower. 2000.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W. W. Norton, p. 217.
- Nancy Bernkopf Tucker. 1995/96. "China as a Factor in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0(4).

Qi Zhou. 2005. "Conflicts over Human Rights between China and the U.S." *Human Rights Quarterly* 27(1).

The Editorial Board, "Is Religious Freedom for Christians Only?," *The New York Times*, February 9, 2019.